

산업계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기대

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



정부가 산업·발전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수치목표를 할당해 발표한 바 있다. 이들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이산화탄소(CO₂)로 환산할 때 총 5억 7,680만 톤으로, 예상배출량 5억 8,510만 톤에서 830만 톤을 줄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산업부문 470만 톤, 발전부문 36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이 할당되었다.

이 결과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에서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%에 달한다.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산업계의 협조 없이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.

이미 발표한 2020년 예상배출량 대비 30%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국가목표에 맞추려면 내년부터 본격적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.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. 이는 정부와 산업계,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상호 협력해야 달성될 수 있는 범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이다.

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5년간(2012~2016년) 3조원 규모의 에너지 절약시설 용자 지원을 시행하고,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(10%)도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.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기술(CCS) 등 감축기여도가 큰 15대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 아울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의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. 우선 녹색분야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.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 의욕이 실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. 또한 공공구매 입찰 시에 에너지효율성, 온실가스 저감기술 우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가격 일률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저감 기술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

국가 발전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 및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.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투자가 당장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주력하기를 기대해 본다.